

[별지 제4호 서식] 평가결과서

정책연구과제명	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		연구기관/ 책임연구원	보건사회연구원/ 김수봉
부서/과제담당관	나라사랑정책과 / 과장 전중호		담당공무원	행정주사 전선희
연구방식	1. 위탁형 용역(○) 2. 공동연구형 용역() 3. 자문형 용역()			
연구자 선정방식	1. 일반경쟁입찰() 2. 수의계약(○)			
연구기간	2009. 9. 28. ~ 2009. 12. 24. (3 개월)			
연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 연구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친일귀속재산과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귀속재산의 의미를 살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. -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과 독립유공자 후손 의식조사, 전문가 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하였고, 현행 보훈제도 및 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음. -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유용한 방향성을 도출함. <별지 1참조> 			
평가결과	<p><별지 2 참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훈선양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가 수행됨 •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헌연구, 국민의식조사 및 후손 의식조사, 전문가 조사, 외국 사례 연구, 관련기관 회의 등 연구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함 •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•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친일귀속재산의 활용과 향후 기금 운용체계 정비를 위한 유용한 제안으로 용역결과를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•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다수 제시 			
평가자	구 분	평가전문위원	과제담당관	
	성 명	안동대학교 교수 김희곤	나라사랑정책과장 전중호	

연구 결과

1. 친일귀속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과 후손들의 의식조사 실시

○ 독립유공자 3~5대 후손 1,000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

- 후손들은 일반국민보다 국가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희망(77%)하며, 국가의 제도적 지원확대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인정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 또는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%에 달함
-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지원 59.6%, 주택지원 19.1%, 의료지원 16.1% 순으로 나타남
- 환수한 친일재산을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사업이 37%, 독립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교육·연구사업이 27.1%,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이 18% 등으로 나타남

○ 국민 의식조사 결과

- 국민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일반국민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(74%)하였으나, 독립유공자 유가족 인정범위는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(57.6%)
-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운동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(33.5%),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사업(25.5%),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사업(25.3%) 순으로 나타남
-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(62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
○ 전문가 조사 결과

- 독립유공자 유가족 인정범위는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(56.8%)
- 친일환수재산 활용 사업으로는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사업(40.5%),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사업(37.8%), 국민 참여 기념사업(16.2%), 상징시설 건립(5.4%) 순으로 나타남
-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(81%)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4~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(8%) 순임

2. 외국 사례(재산환원)의 시사점

- 외국은 전쟁 직후 나치 대상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 처분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제거되었음
-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관련자 등 배상 및 지원에 투입하는 정책을 도입
- 다만 하드웨어적 사업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적 사업으로 숨겨진 애국지사의 미담이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회분위기의 환기 및 교육에 접목
- Soft ware적 사업을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,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
- 장기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반화된 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이러한 한시적인 재정확보는 기금을 통하여 국민적 애국심 등의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음

3.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

○ 친일귀속재산의 기금 전입에 따른 문제점

- 기존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규모가 영세하여 선양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세출예산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음
- 따라서, 귀속재산 전입이 완료되어 매각될 경우 세출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매각대금이 기존사업에 충당되어 새로운 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음
- 한편, 관련단체와 독립유공자 후손, 국민들은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지원대상 범위와 사업내용을 다양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 현행 기금운영체계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또한, 친일귀속재산은 모두 토지로 일시에 매각하기 어렵고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매각을 통한 재원조성에 수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

○ 친일귀속재산 활용의 기본 방향

- 특별법에 의한 재산 환수의 취지를 살려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관리체계가 요구됨
- 즉, 친일귀속재산은 부분적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실시하되 신규 대상자 또는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
- 세부 활용 방안으로는 법령 개정이전 영주귀국자로 수혜를 받지 못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, 독립정신 계승 교육·연구기관 확충,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등 제시
- 독립유공자 4~5대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 및 제수비 확대에 대하여는 재원의 한계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임

○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

- 1안은 순애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에서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, 종전의 사업매뉴얼 사용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나 기금 운영의 독립성 유지가 어려움
- 2안은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으로,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,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
- 최종적으로는 친일귀속재산의 처분·수익사업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기금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순애기금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법인 설립 필요성을 강조

【별지 2】

평 가 결 과

1.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

- 본 연구의 목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된 공시가 1,000억원 상당의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운용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립하려는데 있음
-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친일귀속재산이 전입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영시스템과 기존 사업내용,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친일귀속재산 활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당초의 연구 목적에 부합함

2.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

-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반 국민과 후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재산환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으며,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업무담당자 자문회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였음
- 이를 통해 연구를 위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음

3. 계약내용에의 충실성

- 본 연구는 법령 개정이전 해외 영주귀국자로 정착금 수혜를 받지 못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과 독립정신 계승을

위한 교육·연구기관 확충,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,

- 종전의 순국선열애국기사사업기금 사업과 차별화된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용시스템을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음
- 따라서, 본 연구는 과업지시서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됨

4.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

- 본 연구는 친일귀속재산의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운용시스템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, 친일귀속재산의 활용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5. 기타사항

-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연구과제의 누락 없이 고르게 서술하고 있어 향후 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다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